

북·러 관계발전의 성격 고찰: 2000~2002년 김정일·푸틴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이 동 형 (인하대학교)

◆ 논문 요약 ◆

본 논문은 최근 3차례의 북·러 정상 회담에 대한 국내외적 개최배경과 특징을 연속선상에서 분석하여 양국관계 발전에 대한 성격을 고찰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코자 했다.

북한의 대러정책 목표는 대미·일 협상력 강화와 한반도문제에 대한 지지 유도, 당면한 경제난 극복, 그리고 군사력 재건에 있으며, 러시아는 90년대 초 상실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회복 및 강화와 한국의 경제협력을 유인한 경제 발전을 정책목표로 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상호필요의 인식 속에서 관계개선을 시도한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외교적 상호신뢰구축과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 협력을 구체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발전 속에서도 양국간에는 국내외적 제약요인들이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양국관계발전의 성격은 상호필요에 따른 제한적인 협력관계 발전으로 규정할 수 있다.

북·러 관계발전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적 차원에서 현실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한국은 다각적인 쌍무적 협력관계를 긴밀히 해야하며,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논의에 러시아를 참여시킴으로써 북한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성공적인 남북교류 활성화와 통일 환경조성 측면에서 남·북·러 3각 경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북·러관계 발전에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야 하며, 경협사업과 고려인문제 등 3자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안보환경에 민감한 북·러 군사협력을 긴밀한 한·러 군사교류와 협력을 통해 항상 확인해야 한다.

I. 서론

오늘날 북한과 러시아는 침체된 국가경제의 활성화와 국제사회에서의

체제인정 및 지위회복이라는 현안에 직면해 있다. 지난 10여년간 양국은 이러한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과정에서 양국관계는 단절과 복원, 발전의 단계를 거쳐오고 있다.¹⁾

북한은 그 동안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국제적 고립 탈피와 경제 재건, 체제안정을 위해 대미협상에 매진해 왔다. 그러나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이 계속되자 북한은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대미관계개선에 중점을 두면서도 그 동안 소원했던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복원을 모색했다. 2000년부터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및 유대강화를 모색하는 등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김정일은 또한 남북 대화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러나 2001년 출범한 부시 미행정부가 북한을 ‘불량국가’(rogue state)로, 2002년 1월 29일의 연두교서에서는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하고 대북 강경정책을 구사함으로써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도 냉각시켰다. 북한은 한편으로는 9.11테러 이후 반테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등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²⁾을 경주하고 있고, 남한과의 대화와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일본과도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고위급, 실무자급 인사교류를 넓히면서 양자관계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2000년 출범한 푸틴 러시아 행정부는 침체된 국가경제위기와 정치·사

- 1) 북·러 관계변화원인과 과정에 대해서는 이동형,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변화와 상호이해,” 『동북아논총』 제6권 4호, (2001), pp. 143~167; 고재남, “러시아·북한관계의 현황과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0. 1. 17); 여인곤, 『러·북관계 변화추이와 푸틴의 대북정책 전망』 (통일연구원, 2000); 홍현익, “북·러관계: 정상화의 과정, 원인, 전망,” 백학순·진창수 편, 『“북한문제”의 국제적 쟁점』 (세종연구소, 1999), pp. 328~332 참조.
- 2) 2002년 10월 4일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부시 미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중단된 북·미대화가 재개되는 듯 하였으나,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함으로써 핵문제가 또다시 불거졌으며 이 문제의 논의를 위해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가 동년 11월 2~5일 방북하였다. 이러한 미국 인사의 방북은 북한의 지속적인 대화요구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북한의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발전, 그리고 북·일 정상회담에 기인한다 하겠다.

회적 혼란, 국제사회에서의 강대국 지위 상실 등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국가건설'과 '경제활성화' 그리고 '강대국으로서의 지위 회복'을 국가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실용주의적 전방위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푸틴의 세계전략은 한반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북한과의 관계증진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회복과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 러시아는 북한과 2000년 2월 9일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이하 신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정상적인 국가간의 관계로 복원하였으며, 2000년(7월 10일)과 2001년(8월 4일), 2002년(8월 23일)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는 정치·경제협력뿐만 아니라 군사협력도 꺾하고 있어 우리는 양국관계발전이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 평화에 대한 강화요인뿐만 아니라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한반도가 대륙세력(러시아, 중국)과 해양세력(미국, 일본)의 대결의 장이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대러 인식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은 향후 우리의 대러, 대북정책과 평화적인 통일환경조성에 필요할 것이다. 또한 2002년 5월 24일 미·러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은 러시아가 부시 미행정부가 '불량국가', '악의 축'이라 규정한 북한과 관계발전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측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3년간 개최된 3차례의 북·러 정상회담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동안 대부분의 북·러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역사적 측면에서 관계변화과정과 그 속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었으며, 정상회담들을 관계발전의 연속선상에서 다룬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다.³⁾

3)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Ko Jae-nam, "The Russia-North Korea Summit and Beyond: The Role of Russia on the Korean Peninsula," *East Asian Review*, Vol. 12, No. 3 (Autumn 2000), pp. 65~82; 고재남, "김정일 방러의 평가와 러·북 관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1년 8월 23일); 고재남, "김정일의 극동 방문 평가 및 러·북 관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2. 9. 24); 홍완석, "푸틴 시대 러시아의 신한반도전략: 분석과 대응,"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3호, (2001), pp. 343~363; 홍완석, "북·러 모스크바 공동선언의 함의와 평가," 『통일문제연구』, 제13권 2호 (2001 하반기), pp. 39~6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상대방에 대한 정책 목표와 함께 최근 3차례의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된 각각의 국내외적인 배경과 특징을 연속선상에서 분석하여 양국관계발전에 대한 성격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북한과 러시아의 상호 정책 목표

1. 북한의 대러정책 목표

지난 10년간 북한은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른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 체제생존을 위한 대외정책을 전개해 왔다. 오늘날 대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당면과제 해결이라는 대전략 속에 전방위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은 러시아에 푸틴 행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양국관계를 복원·발전시키고 있다.

북한의 대러정책 목표는 대미·일 협상력 강화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지 유도, 당면한 경제난 극복, 그리고 군사력 재건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측면에서의 대러정책 목표를 보면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발전을 통해 자신의 대미, 대남정책에 대한 배후 지원세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 동안 북한은 미·일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협상의 지속을 위해 핵, 미사일 등 다양한 이슈를 생산하면서 대화를 시도했다. 북한의 모험주의적 정책은 클린턴 전행정부로부터 제네바 핵합의를 이끌어내고 미사일협상을 진행시키는 등의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불신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제재의 지속과 테러지원국으로의 분류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불량국가', '악의 축'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국제적 고립과 체제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지지와 협력을 통해 북·미간의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면서 미국의 대북 불신과 강경정책을 완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9·11테러 이후에는 미국의 반테러 전쟁이 자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등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에 대한 견제카드로서, 남북대화 등 한반도문제에 대한 지지자로서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발전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피하고 압력을 약화시키면서 미국과의 대화재개와 대미, 대남 협상력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의 대러정책 목표는 당면한 식량난과 전력난 등 경제침체현상을 극복하는데 있다.

북한은 미·일과의 관계개선이 부진함으로써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로부터의 자본유입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의 지속적인 악화를 막고 시급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90년대 중반 불어닥친 홍수와 가뭄으로 심각해진 식량난과 에너지 부족현상은 북한을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더욱 곤경에 빠뜨렸다. 이에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식량 및 에너지 관련 지원과 대부분 노후하고 중단된 생산설비들에 대한 개·보수 및 현대화와 부품, 기초원료, 핵심기술 등을 도입하여 경제재건을 꾀하고자 하였다.⁴⁾ 또한 북한은 그 동안 자신의 외화벌이에 효과역할을 해왔던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임업과 어업협력 등 북한 노동력 송출을 통한 협력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북한의 동해선 철도연결사업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의 연결사업을 연계·추진하면서 러시아의 지원으로 철도의 현대화도 추진중에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러경제협력은 시급한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셋째, 군사적 측면에서의 대러정책 목표는 구소련시기 공급된 군사장비와 무기에 대한 각종 부품의 공급과 교체, 그리고 첨단 무기체계와 연료의 지원 확보를 통해 약화된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

러시아와 동일한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는 북한은 1990년대 초반 대러

4) 1950~70년대 구소련의 도움과 직접참여를 통해 북한지역에 건설된 대규모 공장들은 금속재련(김책 재련소), 석유화학(선봉과 웅기), 에너지, 자동차, 섬유, 광업, 식품 등의 산업에 걸쳐 70여개가 있는데 오늘날 매우 낮은 가동율을 보이고 있다. 알렉산더 티모딘, “북·러 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통일경제』 통권 제7호 (현대경제연구원, 1995. 7), p. 51.

관계악화로 인해 공식적으로는 러시아로부터 군사설비와 무기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심각한 부품난을 겪고 있고 군사장비들이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료부족으로 인한 훈련의 감소로 전투력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대부분의 군사장비와 시설을 교체해야 하며, 군사력의 현대화도 시급하기 때문에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적극적이다.

북한은 상기와 같은 정책목표를 가지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제약요인들이 있어 협력 자체보다는 러시아를 전략적 카드로 이용하여 미국과의 대화 재개 및 관계개선과 대남 협상력 강화에 주목적 이 있는 것이다.

2. 러시아의 대북정책 목표

러시아에 있어서 한반도는 동북아 지역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 확보와 지역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극동·시베리아지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지역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한국과의 협력증진을 노력했으나, 이로 인해 북한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한반도지역에서 영향력을 상실하였으며 한국과의 경제협력도 부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국가들로부터도 소외되었다. 러시아는 비판과 반성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회복을 모색했으며, 오늘날 푸틴 행정부 역시도 남북한 균형외교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발전을 통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회복 및 강화와 경제발전에 정책목표를 두고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⁵⁾ 이러한 푸틴 행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를 정치적

5) 러시아의 대북 접근 이유와 대한반도 정치, 경제, 안보적 이해에 관해 언급한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Vasily Mikheev, "South-North Reconciliation and Prospects for North Korea-Russia Relations," *Asian Perspective*, Vol. 25, No. 2 (Summer, 2001), pp. 27~48; В. Ткаченко, "Проблемы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интересах сохранения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2 (1999), pp. 33~42,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3 (1999), pp. 33~44; Joo Seung-Ho, "Russia on Korean Peace and Unification," *Pacific Focus*, Vol. 17, No. 2 (Fall 2002), pp. 97~115; Duckjoon Chang, "The Russian Far East and Northeast Asia: An Emerging Cooperative Relationship and Its Constraints," *Asian Perspective*, Vol. 26,

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군사·안보적인 측면으로 대별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적인 측면에서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발전을 통해 한반도와 나아가 동북아지역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지역강국으로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남북 당사자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해결원칙을 지지하면서 통일과정에서도 외부세력의 간섭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가 동북아 지역문제와 관련이 된다면 러시아는 이해당사국으로써 참여 할 것이며, 이의 논의를 위한 다자간 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한반도와 더불어 동북아 지역에서도 미국의 패권화를 방지하고 중국과 일본의 세력확장을 조정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자국의 극동·시베리아지역의 개발을 통한 경제발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No. 2 (Summer, 2002), pp. 56~69 등이 있음. 그밖에도 V. Denisov, "Korean Reconciliation and Russia's Interests," *International Affairs*, Vol. 48, No. 2 (2002), pp. 41~45; P. Савельев,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нов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России и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2 (2001), pp. 20~24; Г. Бульчев, "Корейска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попытка схематизации,"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2 (2000), pp. 5~12 참조.

- 6) 2000년 7월 21일 푸틴은 북경과 평양을 방문한 뒤 G-8 정상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오키나와로 향하던 중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의 블라고벤스크시에서 열린 극동지역 및 자바이칼리에 지방 개발회의에 참석하여 극동지역 경제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류한배,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형성과정과 메카니즘을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2001), p. 32. 또한 푸틴은 2002년 3월 19일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자본 집약적이며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2010년 이전까지 극동과 자바이칼 지방의 경제·사회 발전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P.A. 미나끼르, "러시아의 새로운 시베리아·극동 개발전략,"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과 한반도』 (제13차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2. 10. 10~11), pp. 47~48. 그리고 푸틴은 동년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해 "우리의 전략적 목적은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이며, 지역경제를 국가경제와 세계경제에 통합시키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을 주장했다. "President signals a future for Far East," *Vladivostok News*, August 30, 2002. vlad.tribnet.com/News/upd30_1.HTM (검색일: 2002. 8. 31).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지역은 자타가 공인하는 자원의 보고로써 천연 가스, 원유, 다이아몬드, 금을 비롯한 여러 유용광물자원이 러시아 전체 매장량 중 90%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의 자원개발을 기반으로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 러시아는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⁷⁾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러시아는 한국을 일본 및 중국과 함께 극동 시베리아 지역개발을 위한 중요한 경험 파트너로 인식하고 한국의 대규모 자본투자를 희망하고 있다.⁸⁾ 또한 러시아는 한반도중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결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푸틴은 TKR과 TSR이 연결되면 운송비 수입과 같은 직접적인 경제이익 외에도 첫째, 한국과 일본의 자본과 물류가 극동·시베리아로 유입되어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견인차의 기능을 할 것이며, 둘째,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강국으로서의 입지강화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 속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⁹⁾

러시아의 이러한 경험방안은 북한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부문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극동·시베리아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남·북한과의 양자간 경제협력보다는 3자간 경제협력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남·북·러 3각 경제협력 발전은 북한지역의 경제난 극복과 극동·시베리아 지역경제의 발전과 같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정치, 안보적 이익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러시아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7) 러시아는 이르쿠츠크 천연가스 개발사업과 사할린, 북극해, 마가단과 캄차카 연안, 하바로프스크 유전개발사업 등을 계획하여 인접국가들의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8) 이에 대해 한국은 이르쿠츠크 천연가스 개발사업과 한반도로의 파이프라인 건설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북한을 통한 천연가스 반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성원용, “남·북한의 러시아간 3각 경험추진 방안,” 『정책연구』 (2000 봄), pp. 104~105.

9) 강원식, “러시아 푸틴정권의 국제정세관과 한반도정책,” 『북한연구학회보』 제5권 제2호 (2001), pp. 313~314.

마지막으로 군사·안보적 측면에서의 대북정책 목표는 한반도지역의 안정화에 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자신의 긴 국경선과 접하고 있는 지역을 선린우호 지대로 만들어 자국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했다. 또한 극동·시베리아지역의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는 러시아는 북한의 체제 안정을 비롯한 한반도의 정세안정이 이 지역의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반도정세는 동북아 지역정세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나아가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에 긴요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위한 다자간 안보대화체제의 창설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야기시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 등 지역국가들의 군비경쟁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화를 저해할 요인이 되며, 나아가 러시아 극동·시베리아지역의 안보를 훼손하는 위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주장하면서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핵과 미사일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반미사일방어(MD)¹⁰⁾연대에 포함시키고 러시아 중심의 세계 미사일통제체제(GCS)에 가입시키고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체제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북한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군사적 지원과 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러시아는 오늘날 남·북한의 군사력이 현격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북한이 안보 딜레마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방어 무기의 보강과 현대화를 지원하여 북한의 불안감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¹¹⁾ 이와 같이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안보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러시아의 대북정책 목표 역시도 북한과의 실질적인 협력

10) MD는 부시 미행정부에 들어와 클린턴 전행정부의 국가미사일방어(NMD)와 전역미사일방어(TMD)를 포괄하여 발전한 것임. 이하에서는 NMD/TMD를 MD로 통일하여 기술할 것이나, 조약문 내용에서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11) 홍현익, “러시아의 대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 방향,” 세종연구소,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제6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 발표논문, 2001. 5. 11), p. 124.

자체보다는 북한을 전략적 카드로 이용하여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강화와 미국과 한국에 대한 협상력 및 협력 제고, 그리고 한반도 안정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다.

Ⅲ. 북·러 정상회담의 분석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가들 간의 관계는 상호의존성의 심화로 여러 가지의 국내외적 문제가 밀접한 상호관계 속에서 거미줄처럼 얽혀있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환경 속에서 각 국가들은 상호이익과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한 긴밀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데,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정상외교인 것이다. 정상외교는 각국의 정상들이 양자간 또는 다자간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상호 의사를 파악하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양국간 또는 국제적인 현안에 대한 원만한 해결과 관계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¹²⁾ 따라서 최근 평양과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어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푸틴 러시아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은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관계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양국관계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긴요할 것이다.

1. 평양 정상회담(2000년 7월 19일)

1) 개최배경

그 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복원하고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위해 2000년 2월 신조약을 체결¹³⁾한 북한과 러시아는 2000년 7월(19~20일) 푸틴

12) 정상회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David H. Dunn(ed.), *Diplomacy at the Highest Level: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Summitry* (New York: St. Martin's Press, Inc., 1996); Glenn P. Hastedt, *American Foreign Policy: Past, Present, Future*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91).

13) 신조약은 1961년 체결된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하 구조약)을 대체한 것으로 1995년 8월 러시아 외무성의 공식적인 개정 제의로 인해 개정작업이 진행되어 1999년 3월 가조인후 2000년 2월 정식 조인되었다. 총12개 조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으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정상화 및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했다.

먼저 북한이 푸틴의 방북을 합의하게 된 배경을 보면, 첫째,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카드를 체제안정과 대미협상카드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미국과의 협상이 난관에 부딪히고 MD체제 구축의 명분으로 작용하게 되자 타책이 필요했다. 이에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문제를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의 이해와 지지를 구함으로써 대미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국제사회에서 형성된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둘째, 2000년 1월 이탈리아와의 수교를 시작으로 전방위의교¹⁴⁾을 추진한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발전을 통해 외교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했으며, 또한 중국과의 경쟁을 유발시켜 대북 지지와 지원을 확충코자 했다. 셋째, 북한은 당면한 경제난과 에너지난을 완화시키고 군사력 회생과 강화를 꾀하고

개조항으로 구성된 본 조약에서 양국은 상호존중과 내정 불간섭, 평등, 호혜주의, 영토보전, 그리고 기타 국제법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호관계를 지속, 발전시킬 것을 공언했다. 특히 본 조약에서는 한국의 최대 관심사항이었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쌍방중 일방에 대해 침략의 위협 또는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한 협의와 상호협력이 필요할 경우 쌍방은 지체없이 상호 접촉”하도록 되었다. 이와 관련한 조약 전문내용은 다음을 참조. “Договор о дружбе, добрососедстве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сентябрь 2000, www.in.mid.ru/dip_vest.nsf/3f48779de9b37e6c43256b8f002f34a7/711eae749094784c32569840051161d?OpenDocument (검색일: 2002. 12. 20).

- 14) 2000년 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북한과 수교한 국가현황을 보면, 이탈리아(2000. 1), 호주(2000. 5), 필리핀(2000. 7), 영국(2000. 12), 네덜란드(2001. 1), 벨기에(2001. 1), 캐나다(2001. 2), 스페인(2001. 2), 독일(2001. 3), 룩셈부르크(2001. 3), 그리스(2001. 3), 브라질(2001. 3), 뉴질랜드(2001. 3), 쿠웨이트(2001. 4), 바레인(2001. 5), 터키(2001. 6) 등 16개국이다. 『북한연감』(서울: 연합뉴스, 2001), p. 867. 이러한 북한의 적극적인 대외정책 추진의지는 2001년 공동사설에서도 잘 나타난다. 본 사설에서 북한은 최근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수교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면서 ‘자주정치’를 강조하고, 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이라면 어떤 나라든지 대외관계를 개선할 것이며 세계의 자주화와 인류의 평화위업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2001. 1. 1),” www.kcna.co.jp/item2/2001/200101/news01/01.htm (검색일: 2002. 10. 15).

자 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경제회생의 기반이 되는 산업시설들에 대한 개보수 및 현대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했고, 생산설비와 군수산업 및 군사 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시급했다. 또한 북한은 저하된 군사력의 향상을 위해 군사장비와 무기, 부품의 재정비 및 교체, 그리고 현대화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푸틴의 입장에서 방북을 추진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MD문제를 연계시킴으로써 국제사회와 동북아, 한반도 지역에서의 입지강화와 지역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었다. 푸틴은 오키나와 G-8 정상회담(2000년 7월 21~23일) 직전 중국(7월 17~19일)과 북한을 방문하여 미국의 독자적인 MD체제 구축에 반대하는 힘을 결집코자 했으며, MD체제 구축에 명분을 제공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G-8정상회의에서 자신의 외교력을 과시하고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문제는 미국의 MD체제 구축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국가들의 군비경쟁을 유발시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극동·시베리아지역의 안정과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이 중요했던 것이다. 푸틴의 방북배경 중 두 번째는 북한과의 관계발전을 통해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었다. 러시아는 그 동안 친남한 편향정책으로 말미암아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이는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관심 저하로 이어져 한·러 경제협력이 부진하게 되었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도 상실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푸틴은 한국보다는 북한을 먼저 방문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음을 대내외에 알리고 북한과의 관계회복을 통해 남북한 균형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푸틴은 북한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경제, 군사적 지원과 협력에 부응하면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6·15 남북 정상회담이후 활성화되고 있는 남북교류와 연계한 남·북·러 3각 경제협력으로 발전시키고자 했으며, 한국에 대한 무기수출사업에도 커다란 관심을 가지면서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임했다고 볼 수 있다.

2) 공동선언 내용분석 및 특징

2000년 7월 19~20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총11개항으로 구성된 공동선언(이하 '평양선언')¹⁵⁾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불리하게 조성되고 있는 외부환경의 변화를 위해 쌍무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고자한 양국정상의 의지가 잘 나타나고 있다.

우선 북한은 “개별국가의 체제선택의 자주적 권리와 내정 불간섭, 독립, 자주권, 영토보존의 수호를 위한 쌍방의 노력”(제5항)에 러시아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체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또한 북한은 “자신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순수한 평화적인 성격을 띤다고 확인”(제6항)함으로써 미국의 MD체제 구축의 빌미가 되고 있는 자국의 핵·미사일 개발문제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력을 모면하고자 했다. 나아가 북한은 러시아와 함께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상호협력을 다짐”(제7항)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국제협력과 함께 이에 대한 아세안지역포럼(ARF)의 역할 증대에 기여할 의향을 표명”(제9항)하여 테러지원국으로서의 오명을 제거하고 평화애호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고자 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은 “6·15 남북 공동선언에 따른 한반도 통일 문제의 남·북한 자주적 해결과 외부의 불간섭”(제3항)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를 이끌어 내어 미국의 간섭과 압력을 배제코자 했다.

한편 러시아는 “전략적 안정의 초석인 요격미사일제한(ABM)조약의 유지·강화를 강조하고 제2차 전략공격무기감축조약(STRAT-II)의 완전한 이행과 제3차 전략공격무기감축조약(STRAT-III)의 조속한 체결, 그리고 ABM조약 수정계획과 TMD체제의 구축 반대”(제6항)에 북한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북한을 反MD연대에 끌어들이며 미국의 ABM조약 수정과 MD체제 구축에 대한 반대, 그리고 미국과의 군축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러시아는 다극적 국제질

15) 공동선언 전문은 다음을 참조. “Текст Совместной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й декларации,” www.in.mid.ru/ns-rasia.nsf/1083b7937ae580ae432569e7004199c2/432569d80021985f4325699c003b6053?OpenDocument (검색일: 2002. 12. 20).

서의 구축(제1항)과 힘의 사용 중지 및 UN의 역할 강화(제4항)에 대한 북한과의 합의를 통해 미국중심의 패권적 국제질서 구축에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였다. 한반도문제에서도 러시아는 지지를 표명(제3항)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입지를 확보하고자 했다.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를 위해 북한과 러시아는 제1, 2항에서 정치·안보협력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양국 정상간 신뢰구축을 다졌다. 특히 안보위기사 즉각 접촉한다는 제2항은 양국의 안보적 협의 범위를 폭넓게 설정함으로써 양국의 군사·안보협력 발전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국은 제8, 10, 11항에서 경제협력에 대한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협력가능분야, 특히 북한의 관심분야인 합작기업의 재건에 대한 협력을 다짐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평양 정상회담은 과거 단절되었던 양국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체결한 신조약을 기반으로 향후 관계발전의 기틀을 다지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특히 정상회담의 핵심적인 논의사항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미국의 MD체제 구축문제였다. '강대국으로서의 지위회복'을 국가정책 목표로 설정한 푸틴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초강대국인 미국에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직도 유용한 핵전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푸틴은 MD체제 구축의 명분이 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문제에 개입해야 하며, 이는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긴요한 문제라고 보았던 것이다. 결국 푸틴은 김정일로부터 미사일 개발계획의 조건부 포기¹⁶⁾ 의사를 이끌어 내어 이를 G-8 정상회담에서 주요 논의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및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대미, 대남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북한은 공동선언 제6항에서 나타났듯이 자신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를

16) 1998년의 탄도탄미사일 발사는 인공위성 발사 실험이었으며, 따라서 다른 국가가 인공위성 발사에 협력해 준다면 북한은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2000. 7. 20, ng.ru/world/2000-07-20/1_phenian.html (검색일: 2002. 12. 20).

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에 러시아를 끌어들이어 외교·안보적 결속을 강화함으로써 대미, 대남 협상력 제고와 국제사회에서 위축된 입지를 넓혀 전방위 외교의 추진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북한은 군사분야와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을 정상회담을 통해 공식화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푸틴의 방북은 양국의 쌍무적 협력관계의 발전기틀을 다지고 정치·경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모스크바 정상회담(2001년 8월 4일)

1) 개최배경

평양 정상회담이후 북한과 러시아는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2000년 10월 17~21일에는 제3차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 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였고, 동년 11월 28일~12월 6일에는 리인규 북한 외무성부상이 극동지역을 순회하면서 러시아극동지방정부와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모색하였다. 또한 2001년 3월(16~20일)에는 악쇼네크 러시아 철도부 장관이 방북하여 철도협력을 위한 회담을 개최하고 TSR과 TKR 연결사업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북한과 러시아는 최대현안 중의 하나였던 북한의 대러 외채문제를 2001년 5월 25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진행된 양국 경제실무협상을 통해 외채규모를 55억달러로 결정하고 향후 30년간 분할 상환한다는 데 합의¹⁷⁾함으로써 일단락지었다. 군사적으로는 2001년 4월 27일에는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이바노프 국방장관과 '2001년 군사협력협정'을 체결하고 북한 군인사

17) 북한은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사이에 전후 복구와 경제건설 명목으로 구소련으로부터 40억 루블에 이르는 외채를 얻었다. 구소련의 붕괴이후 러시아와 북한은 북한의 대러외채에 적용할 환율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 왔다. 러시아는 40억 루블에 이르는 북한 외채에 1991년 구소련 해체 당시의 환율인 1달러=0.6루블을 적용하자고 주장한 반면, 북한은 현재의 환율인 1달러=28.9루블을 주장해 왔다. 『중앙일보』, 2001. 6. 26.

에 대한 교육 등을 포함한 양국간 군인사 교류활성화를 모색했으며, 클레바노프 방위산업담당 부총리와의 '방위산업 및 군사장비 분야 협력협정'을 조인했다.¹⁸⁾

북한과 러시아의 이러한 협력관계의 발전은 김정일의 방러(2001년 7월 26일~8월 18일)를 실현시킬 수 있었는데, 김정일의 모스크바 방문의 배경을 보면 첫째, 부시 미행정부의 출범이후 북·미관계가 냉각되었으며, 미국이 MD체제 구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러시아와의 의견 조율과 연대 강화가 필요했다. 둘째, 미국의 MD체제 구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연대를 통해 한·미·일과의 대화 재개와 협상력 강화를 모색코자 했다. 셋째,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제협력을 구체화하고자 했다. 북한은 경제재건을 위해 개·보수가 시급한 생산시설들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이 필요했고, 특히 심각한 전력난의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협력이 절실했다. 넷째, 군사력 강화를 위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했다.

푸틴의 입장에서는 첫째, 미국의 MD체제 구축에 반대하는 세력을 결집하여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강화하여 대남한 카드로 활용코자 했다. 푸틴은 미국의 ABM조약 탈퇴와 MD체제 구축 강행에 대해 한편으로는 전략핵무기 감축과 START-III 협상을 제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군축과 군비조약으로부터의 탈퇴, 중거리 핵미사일의 재배치, Topol-M 등 신형미사일의 개발 및 배치의 가능성도 경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였다. 또한 푸틴은 유럽, 중국, 북한 등 MD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반대하는 국가들과의 反MD연대를 위한 외교력

18) 영국의 *The Sunday Times*는 러시아가 단거리 방공시스템과 SU-27, MIG-29 전투기, 무인 프첼라(PCHELA)-1 정찰기, 미군과 한국군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레이더, 소형 해군순찰함정 등 총 3억 5천만 파운드(7천억원) 상당의 무기공급과 탱크와 무기조립공장의 현대화를 돕기 위한 군사기술자들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고 4월 2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2001. 4. 29, 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852001042900100(검색일: 2002. 12. 20). 이에 대해 클레바노프 부총리는 “이번 협정은 이미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제 무기의 현대화에 초점을 두었으며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2001. 4. 29, www.donga.com/fbin/news?f=print&n=200104290161 (검색일: 2002. 12. 20).

을 강화하기도 했다.¹⁹⁾ 이와 같이 푸틴은 反MD 연대 구축의 연장선상에서 김정일의 방문을 받아들였다. 둘째, 푸틴은 지난 평양 정상회담이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산업시설 재건에 대한 요구를 한국이 참가하는 3각 경제협력의 형태로 발전시키고자 했으며, 나아가 6·15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에 긴장이 완화되고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TKR과 TSR 연결사업을 현실화시키고자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 러시아는 북한이 서두르고 있는 북한 군사력 강화를 위한 현대화에 지역안보를 고려한 제한적인 부응으로 경제적, 군사·안보적 실리를 추구하고, 나아가 한국에 대한 무기수출의 환경을 조성코자 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양국정상은 모스크바에서 만나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국제적인 문제와 양국간의 협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관계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2) 공동선언의 내용분석 및 특징

2001년 8월 4일 양국정상은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그 결과를 총8개항으로 구성된 '북·러 모스크바 선언'(이하 '모스크바선언')²⁰⁾을 통해

19) 고재남, 『푸틴 정부의 외교정책과 미·러 관계의 전망』 정책연구시리즈 2001-5 (외교안보연구원, 2002), pp. 49~50. 그러나 푸틴은 적극적인 反MD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을 남겨 둬. 러시아는 2001년 7월 이탈리아에서의 미·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푸틴은 미국의 MD문제와 양국의 핵 무기 대폭감축을 연계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ABM조약의 수정 가능성도 보였으며, 8월의 미·러 안보회담에서 러시아 총참모차장 유리 발류에프스키는 “러시아는 MD체제의 시험 자체는 미국이 사전에 통보하는 한 ABM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힘으로써 MD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변화를 암시. 『연합뉴스』, 2001. 8. 11, www.yonhapnews.net/cgi-bin/naver/getnews?712001081001300+20010811 (검색일: 2002. 11. 1). 이러한 러시아의 이중적인 태도는 MD반대를 통해 한편으로는 국제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받음으로써 강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보장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로부터의 경제협력 유인이라는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겠다는 푸틴의 실용주의 외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0) 공동선언 전문은 다음을 참조. “Москов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www.ln.mid.ru/ns-rasia.nsf/1083b7937ae580ae432569e7004199c2/432569d80021985f43256aa

발표하였다. ‘모스크바선언’의 내용 중 제1, 3, 7항²¹⁾은 ‘평양선언’에 대한 재확인이며,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내용들도 존재한다.

우선 러시아의 배려 또는 양보를 통한 북한의 의지가 나타나는 부분을 보면, 제2항에서 북한은 “자신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평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타국에 위협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러시아는 북한의 이러한 입장을 환영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야기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미국의 대북압력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러시아가 옹호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은 푸틴에게 2003년까지 미사일 발사를 유예할 것임을 재확인²²⁾함으로써 푸틴의 양보를 이끌어 내었다고 볼 수 있다. 제8항에서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했다. 북한은 6·15 남북 정상회담이후 주한미군에 대한 문제를 사실상 ‘묵인’해 왔으나,²³⁾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지속하고 특히 북한의 재래식무기감축문제까지 의제화하려 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한 것이었다. 북한은 이 문제를 대미협상카드로 활용해 북·미 대화의 재개와 협상력 강화를 모색코자 했던 것이다. 러시아는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감안해 “이 입장에 대한 이해를 표명하고 비군사적 수단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수준에서 절충함으로써 북한의 입장을 배려하였다. 나아가 러시아는 “북·미, 북·일 회담의 진전을 기대”한다고 언급함으로써 북한의 대미·일 관계 정상화 의지에 대한 지지와 그 과정에서 자국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코자

0004c19eb?OpenDocument (검색일: 2002. 12. 20).

- 21) 제1항 - 세계적 안정과 UN역할의 강화,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테러와 호전적 분립주의에 대한 공동대처), 제3항 - 2000년 조인된 ‘평양선언’과 신조약에 기초한 양국의 친선관계 확대발전), 제7항 - 6·15 남북 공동선언의 지지와 외세 불개입.
- 22) 『중앙일보』, 2001. 8. 4, nk.joins.com/article.asp?key=2001080422331750005000 (검색일: 2002. 12. 20).
- 23)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주한미군 필요론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0년 10월 조명록 차수의 방미시 주한미군 용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강원식, “러시아 푸틴정권의 국제정세관과 한반도정책,” p. 320.

했다. 이 외에도 제5항의 “특히 전력부문 기업의 재건계획을 우선적으로 실현하기로 약속”했다는 부분 역시도 북한의 요구에 대한 러시아의 합의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이해 속에 러시아의 의지가 투영된 부분은 제5, 6, 7항에서 볼 수 있다. 제5항에서는 “쌍무결제의 과거문제를 조정하는데 기초하여 합작기업 특히 전력부분 기업의 재건을 우선적으로 실현하고, 이를 위해 러시아는 북한의 양해하에 외부재원을 유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북한이 지고 있는 55억 달러의 부채를 경험과 연계시키겠다는 러시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나아가 대북 투자자본이 부족한 러시아에 입장에서는 한국을 고려한 3각협력 속에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외채와 상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²⁴⁾ 제6항에서는 “TKR과 TSR의 연결사업이 실현단계에 진입했음을 선포”하였다. 러시아는 북한철도의 현대화와 남북철도 연결사업에도 참가를 희망하는 등 철도연결사업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제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질적인 연결사업을 추진하자는 푸틴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제7항에서 “러시아는 6·15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와 남북문제의 외세 불간섭을 지지하며, 향후 한반도에서 러시아는 건설적이며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 것은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확실히 다지고자하는 러시아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평양선언’에서와는 달리 “ABM조약의 준수 및 보존”(제2항)은 지속하면서도 MD체제 구축에 대한 사항은 제외함으로써 러시아의 대미관계, 특히 MD에 대한 입장이 변화²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스크바선언’에서 나타난 북한의 이해는 러시아와의 정치·안보적 결속

24) 푸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인 한반도 접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위한 만찬장에서의 환영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북·러협력의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무역·경제관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 또한 러시아는 북한과도 한국과도 다양한 실속있는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Выступление В.В. Путина на официальном обеде в честь Ким Чен Ира 4 августа,”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сентябрь 2001, [www.in.mid.ru/dip_vest.nsf/3f48779de9b37e6c43256b8f002f34a7/d4fa352adc3fa70ac3256ae700492691?](http://www.in.mid.ru/dip_vest.nsf/3f48779de9b37e6c43256b8f002f34a7/d4fa352adc3fa70ac3256ae700492691?OpenDocument) OpenDocument (검색일: 2002. 12. 20).

25) 각주 16 참조.

강화를 통한 미국으로부터의 압력해소와 대미 대화재개 및 협상력 신장, 군사협력²⁶⁾을 통한 군사력 현대화, 경제협력을 통한 전력난 해소와 넓은 산업시설의 재건에 있었다. 한편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증진을 통해 대미 협상력 제고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강화 등의 정치·안보적 이익과 TKR-TKR 연결사업의 구체화와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외부재정의 도입 등의 경제적 이익, 그리고 군사부문의 협력을 모색하는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증진을 꾀하고자 했다. 이와 같이 양국간의 협력은 점차 선언적인 측면보다는 양국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2002년 8월 23일)

1) 개최배경

2001년 모스크바 정상회담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관계는 급속히 진전되었다. 양국간의 밀접한 외교관계는 김정일의 안드레이 카를로프 평양주재 러시아대사의 접견(2001년 12월 5일)과 러시아대사관 방문(2002년 1월 6일, 3월 17일)이나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모스크바주재 북한대사관 방문(2002년 1월 18일)뿐만 아니라 백남순 북한외무상의 방러(2002년 5월 20~23일)²⁷⁾와 이바노프 외무장관의 남북한 연쇄방문

26) 군사협정은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과 정외 행보를 보면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은 음스크의 '트란스마쉬'사를 방문(7월 29일)하여 T-80탱크 등의 생산품과 조립과정을 살펴보고, 모스크바 근교의 흐루니체프 우주센터와 우주지상통제소를 참관(8월 5일)했으며, 노보시비르스크에서는 시베리아 제1의 과학단지인 아카데미고로드의 핵물리학연구소와 SU-34 전폭기를 생산하는 츠칼로프 공장을 참관(8월 11일)하는 등 러시아의 군수산업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연합뉴스』, 2001. 8. 18, www.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 142001081802100 (검색일: 2002. 12. 20).

27) 양국 외무장관은 회담(2002년 5월 21일)에서 양국간 경제·무역관계를 더욱 증진키고 합의하고, 특히 양국간 경협문제와 관련해 TKR-TSR 연결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더욱 촉진키로 했으며, 북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원과 항만 등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국제정세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뒤 '북·러 외무부간 2003~

(2002년 7월 26~29일) 등에서도 잘 나타났다.

또한 양국은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해 활발한 접촉을 가졌다. 정상회담 직후인 2001년 9월(4~14일)에는 바체슬라브 발라킨 러시아 철도부 국제협력국장이 방북하여 TKR-TSR 연결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2002년 2월(10~12일)과 4월(24~27일)에는 콘스탄틴 폴리코프스키 러시아 극동지역 전권대표가 북한을 방문하여 외채 상환문제 등 현안문제와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북한과 극동지역간 '협력에 관한 비망록'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02년 3월말에는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문제와 북한 노동자들을 모스크바 소재 공장에서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문제를 포함한 상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동년 4월(4~12일)에는 북한의 조창덕 내각 부총리가 경제대표단을 인솔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하고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²⁸⁾

이와 같이 북한과 러시아는 2001년 정상회담이후 실질적인 협력관계로의 발전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협력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따라서 양국정상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나 비공식 정상회담을 개최(2002년 8월 23일)했던 것이다.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은 다음과 같은 양국의 필요에 의해 개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첫째, 2002년에 들어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태세검토보고서'의 공개를 통해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 등 7개국을 핵공격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더욱 강경해진 미국의 대북압력을 약화시켜야 했다. 둘째, 9·11 테러사건이후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반테러전쟁은 북한에게는 안보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불안정한 안보정세를 개선해야 했다. 셋째, 미국이 반테러전쟁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였기 때문에 외교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했다. 넷째, 북·일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재개 직전에 푸틴과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러시아에게는 정치적 신뢰를 증진시

2004년 교류 협력 계획서'에 조인했다. 『연합뉴스』, 2002. 5. 22, bbs.yonhapnews.net/ynaweb/printpage/News_Content.asp (검색일: 2002. 5. 22).

28) 자세한 내용은 『연합뉴스』, 2001. 12. 6, 2002. 3. 24, 2002. 4. 13 참조.

키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협상력을 강화하여 대북지원 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다섯째, 2002년 7월 1일부터 임금인상 및 물가 현실화, 공장·기업소 경영개선 등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²⁹⁾하여 제한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김정일은 러시아 극동지역 도시들에 대한 시찰을 통해 경제개혁 프로그램과 성과를 확인하고, 극동지역 경제와 의 협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혁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자하는 의 도도 내포되었다.

한편 러시아는 첫째, 모스크바 정상회담이후 변화된 국제정세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 북한 및 한반도에서의 입지를 지속, 강화하고자 했다. 둘째, 2002년 5월의 미·러 정상회담이후 러시아는 미국이 '악의 축'으로 규정된 이란과 이라크와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경제적 실리와 함께 대미 정치·경제적 협상력 강화를 모색해 왔다. 북한과의 정상회담도 이 러한 측면에서 필요했던 것이다. 셋째, TKR-TSR 연결사업을 더욱 적극 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넷째, 극동지역의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 서는 북한과의 협력이 필요한데, 특히 이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은 자원개발 에 북한의 노동력이 절실하며 나아가 한국이 참여하는 3각 경제협력의 활 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양국정상은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도모하여 국제사회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제고와 미국과 일본, 한국에 대한 협상 력 강화를 위해 만났으며, 특히 만남의 장소를 블라디보스톡으로 택함으로 써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발전을 도모 하고자 했던 것이다.

2) 논의내용 분석 및 특징

2002년의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은 비공식 실무회담으로 개최되어 공 동선언이 발표되지 않아 정확한 합의사항은 알 수가 없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기자회견 연설내용³⁰⁾을 보면 양국은 국제적인 문제와 한반도

29) 『조선신보』, 2002. 7. 26, www.korea-np.co.jp/korea/sinbok/sinbok-2002/sink02-07/0726/201.htm (검색일: 2002. 12. 20).

문제, 그리고 양국간의 정치·경제협력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먼저 정치적인 측면에서 푸틴은 모스크바 북·러 정상회담이후 변화된 국제정세와 최근의 미·러 관계 및 미·러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자국의 입장, 특히 미국의 ABM 탈퇴와 MD체제 구축 강행에 대한 자국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북한의 이해를 구하고 북한 및 한반도에서의 입지를 지속, 강화하고자 했다. 김정일은 미국의 강경정책 속에서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북·러 정상회담 이후 개최될 북·일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재개에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푸틴의 지지를 확보하여 대한·미·일 협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여기에서 푸틴은 러시아의 남북관계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의사를 표명하고 김정일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자국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다음으로 경제적인 측면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였으며 구체적인 협력방안들을 논의하였다. 모스크바 정상회담이후 북한은 여러 차례의 실무회담을 통해 전력분야를 중심으로 한 산업시설들의 개·보수를 위한 러시아의 지원과 협력뿐만 아니라 임업과 어업, 광업, 농업,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³¹⁾ 따라서 김정일은 이번 극동방문에서 이러한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논의³²⁾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푸틴은 정상회담에서 TKR-TSR 연결사업을 최우선 의제로 내세우면서 양국간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한반도에서는 6·15 남북 정상회담이후 최근에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사업이 실현단계로 발전하고

30) “Выступ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В.Путина перед журналистами по окончании беседы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обороны КН ДР Ким Чен Иром,” www.in.mid.ru/ns-rasia.nsf/1083b7937ae580ae432569e7004199c2/432569d80021985f43256c21002cb68d?OpenDocument (검색일: 2002. 11. 5).

31) 『연합뉴스』, 2002. 3. 24, www3.yonhapnews.net/cgi-bin/naver/getnews?142002032401900+20020324; 2002. 4. 13, www3.yonhapnews.net/cgi-bin/naver/getnews?142002041301800+20020413 (검색일: 2002. 10. 28).

32) 러시아의 RIA Novosti는 크렘린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벌목, 석유채굴, 광업, 수산업 분야 등에서의 협력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 *Pravda*, 2002. 8. 22, pravda.ru/diplomatic/2002/08/22/34979.html (검색일: 2002. 11. 1).

있어 만약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중국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³³⁾ 러시아는 2001년 모스크바 정상회담 직후부터 철도연결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사작업을 시작으로 북한 기술자를 러시아로 초청해 기술훈련을 시키고 있으며, 북한 철도의 현대화와 동해선 연결사업에도 참가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TKR-TSR 연결사업은 남북한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북·러 경제협력과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서도 한국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푸틴은 정상회담 후의 기자회견에서 “남북한의 협력은 곧 러시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 협력을 계속해서 시도할 것”³⁴⁾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한과 인접한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TKR-TSR 연결사업을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변화된 국제정세와 한반도정세에 대한 상호이해와 지지를 통해 상호신뢰 강화할 수 있었으며, 연례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푸틴은 북한 및 한반도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이 있음을 김정일은 국제사회에 정상적인 지도자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와 더불어 미국과 일본, 한국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IV. 북·러 정상회담의 평가

1. 북·러 정상회담의 평가

2000년 2월 신조약을 체결한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급속히 복원·발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

33) 푸틴은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극동발전 대책회의’에서 “우리는 철도연결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중국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는 중국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해 TKR-TSR 연결사업을 성사시켜야하고 이것이 바로 내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연합뉴스』, 2002. 8. 25, www3.yonhapnews.net/cgi.../getbody?142002082501000+2002082 (검색일: 2002. 9. 5).

34) *Pravda*, 2002. 8. 23, pravda.ru/politics/2002/08/23/35133.html (검색일: 2002. 11. 1).

시키고 있다. 그 동안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주요의제들을 점차 구체화했으며, 정치·외교적인 문제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그 논의의 초점을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양국을 둘러싼 국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그 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복원하고 발전시키고자하는 양국 정상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1) 정치·안보적 측면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양국간의 문제는 물론 핵·미사일 등 국제문제와 한반도 주변정세 등에 대한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함으로써 정상간의 신뢰 증진과 양국간의 우호, 협력증진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국관계발전은 동북아와 국제사회에서 서로의 입지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대미, 대일, 대남 협상력 강화에도 기여하였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첫째, 대외적으로는 정상적인 지도자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대내적으로는 체제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미국의 MD 체제 구축과 대북강경정책에 중요한 빌미가 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푸틴의 외교·안보적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미국의 압력을 약화시키고 국제적 고립을 탈피할 수 있었다. 셋째,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와 국제테러와 호전적 분립주의 등 모든 형태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반대를 표명함으로써 '테러지원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대미 대화재개와 관계정상화를 위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한반도문제에 대한 자주적 해결과 외세불개입 원칙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를 바탕으로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남북대화를 주도하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지원과 협력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동북아 지역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고 대미, 대남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는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미국의 MD체제 구축을 반대할 수 있는 명분과 세력을 축적하여 미국과의 대등한 대화 또는 협상파트너로 인정받고자 했다.³⁵⁾

35) 결국 푸틴은 미국의 MD체제 구축을 지지하지는 못했지만, 2002년 5월 모스크

둘째, 북한으로부터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용인받음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해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대남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이러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강화로 지역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북·미, 북·일 대화재개 및 관계정상화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북한과의 정치·안보협력을 통해 극동·시베리아지역의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정치·안보적 협력강화는 양국관계발전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평양 정상회담의 핵심적인 논의사항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국제적 고립탈피와 체제안정, 그리고 대미 대화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의 발판을 마련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지위와 대등한 대미 협상파트너로서의 입지 강화를 모색하였다.

2) 경제적 측면

그 동안의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경제협력발전과정을 보면,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경제협력을 위한 환경조성을 합의하였고,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은 전력부문 합작기업을 중심으로, 러시아는 TKR-TSR 연결사업을 중심으로 자국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이 설정되었다.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에서는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임업, 어업, 건설 등 실질적인 경제협방안이 논의되었고, TKR-TSR 연결사업의 실현 가속화를 약속했다. 이와 같이 북한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을 통해 침체된 경제상황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들을 모색했는데, 북한의 대외외채에 대한 합의 후 모스크바 정상회담과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을 거치면

바에서 개최된 미·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새로운 전략적 관계 공동선언'과 '전략공격잠재력감축조약', '새로운 에너지대화 공동성명', '경제관계발전 공동성명', 그리고 '반테러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체결하고, NATO와 러시아의 협력관계 격상(Russia-NATO Council)에 미국이 협력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경제협력과 더불어 국제적 문제에 대한 대등한 대화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보장받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향상의 계기가 됨.

서 구체화했다.

북한은 당면한 전력난과 경제난의 극복을 위해 러시아에 대해 원자력 발전소 등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개·보수 및 산업시설의 가동을 위한 원료공급과 통신·항만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그리고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노동력 송출을 통한 경제협력 등을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을 통해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자국의 자원과 북한의 노동력, 한국의 자본을 합한 3각 경제협력의 바탕 위에 북한지역의 산업시설에 대한 재건사업과 극동지역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외부자원 인입이라는 선에서 북한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러시아는 TKR-TSR 연결사업의 실현을 위해 북한기술자들을 러시아로 초청해 기술훈련을 시키고 북한지역 철도현대화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에서 푸틴은 많은 부분을 철도 연결사업에 할애하면서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으며, 북한 역시도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관심을 증가시켰다.

이와 같이 북한은 자국의 경제재건에 시급한 부분을 중심으로 러시아와의 쌍무적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고자 했지만, 러시아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북한과의 협력을 모색했다.

3) 군사적 측면

양국간의 군사협력은 한반도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언급은 없다. 그러나 김정일이 두 차례의 방러과정에서 북한군관련 인사들과 함께 러시아의 군수산업시설들을 시찰했다는 것은 북한이 군사력 강화를 위한 대러 협력을 모색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오늘날 북한이 무기현대화와 첨단무기 및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창구는 러시아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김정일은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협력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러 군사협력 요구에 대해 러시아의 대북 군사협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북한정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불가능하다. 또한 경화결제가 어려운 북한의 경제상황이 러시아의 대북 무기수출에 장애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력이 완전히 무력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게다가 북한과의 정치·안보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협력은 필요하다.³⁶⁾ 또한 러시아는 한국이 러시아제 무기를 수입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도 북한과의 제한적인 협력은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정치,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의 대북 군사협력이 가능한 것이다.

2. 북·러 관계발전의 한계

북한과 러시아는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통해 관계발전을 꾀하고 있지만, 양국이 당면한 국내외적 문제점으로 인해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북한과 러시아가 당면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침체된 경제상황이라는데 있다. 양국의 입장에서는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만 국내 정치, 사회적 안정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도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해 왔다. 그러나 양국 모두가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자본과 선진산업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쌍무적 경제협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한국 등 주변국가들과의 다자간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도 당면한 경제난을 해소하고 한국과 미·일 등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을 유인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러시아와 북한의 서로에 대한 관심은 적어도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은 미·일과의 관계정상화와 경제원조를 위한 유인세력 또는 그 협상과정에서의 배후지지세력으로써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도모했으며, 러시아 역시도 동북아와 한반도지역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입지 강

36) 이바노프 국방장관이 2002년 8월 26일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공격용 무기는 고사하고, 현대적인 것으로도 불릴 수 없는 일부장비들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는 북한에 공격용 무기를 공급할 의향이 없다”고 한대서도 잘 알 수 있다. 고재남, “김정일의 극동 방문 평가 및 러·북 관계 전망,” p. 10.

화와 한국이나 지역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북한에 대한 접근정책을 추진했다. 따라서 양국관계는 미국의 대러, 대북정책 변화와 한반도 및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양국간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이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데 또 다른 한계가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문제에 대한 '당사자 해결원칙'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자신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이러한 문제들을 대미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미국으로부터 안보·경제적 이익을 보장받으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자간 안보대화에도 부정적이다.

넷째, 러시아의 대북, 대미 영향력이 아직은 결정적이지 못하다. 러시아는 그 동안 북한에게 한국 답방을 통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권고했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북·미관계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못함으로써 북·미 대화의 재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러시아는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기보다는 변화과정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극동·시베리아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접경지역인 북한 및 한반도지역의 안정이 필요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북한의 경화결제 능력부족은 양국 군사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V. 결론 : 한국의 대응방안

푸틴 러시아대통령 이전 10년과 비교한다면 지난 3년간의 북·러관계는 급속한 발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관계발전은 과거 10년의 반성에 따른 양국 정상층의 이해의 일치였으며, 미국의 MD체제 구축 강행이 그 촉매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자신의 핵·미사일 문제를 빌미로 한 미국의 압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대응책으로써 러시아의 지지가 필요했으며, 또한 심각한 경제난과 전력난 그리고 군 전력 약화 등 총체적 위기로부터의 탈출을 위해서도 러시

아와의 협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자국과 인접한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재건의 토대를 모색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블라디보스톡 방문에서나 그 동안의 방러, 방중시에 대규모 경제관련인사를 이끌고 현지 산업시설들을 시찰을 했다는 점과 최근 북한에서도 경제개혁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자국의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해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개혁 성과와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재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을 잇는 경제협력, 즉 극동지역의 임업과 어업, 농업, 광산업 등에서의 북한 노동력을 매개로 한 협력과 북한지역의 통신, 항만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그리고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소 건설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의 MD체제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를 통해 미국과의 대등한 대화 및 협상파트너로써 인정받고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경제협력을 유인하고자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MD체제 구축의 빌미를 제공한 북한은 러시아에게 있어 좋은 협력의 대상이었으며, 나아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강화와 한국과의 경제협력에도 필요한 존재였던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발전을 통해 다양한 정치·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TKR-TSR 연결사업을 성사시키고, 극동·시베리아지역의 자원개발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러시아의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한국을 포함한 3각 경제협력으로 나아가 주변국가들을 참여시키는 다자간 경제협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상호필요의 인식 속에서 관계개선을 시도한 북한과 러시아는 그 동안 3차례의 북·러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정치·외교적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협력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상회담에서 주요논의가 정치·외교적 협력차원에서 경제적 협력차원으로 구체화되었음에서 잘 나타나는 것으로 양국의 실용주의적 접근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국간에는 이상에서 언급한 제약요인들도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관계발전의 성격은 국내외적 제약요건 속에서 상호

필요에 따른 제한적인 협력관계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이상과 같은 협력관계에 대해 한국정부는 국익적 차원을 고려한 현실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첫째,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당사자간의 해결원칙과 대화와 협력을 통한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과 자국에 우호적인 통일한국을 지지해 왔으며, 이는 6·15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내용과도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러시아는 남북 관계발전과 한반도 통일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로도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러시아가 남·북 관계발전과 한반도 통일과정에 적극적인 협력을 제공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경제·군사·안보 등 다각적인 쌍무적 협력관계를 긴밀히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6자회담 등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논의에 러시아를 참여시킴으로써 북한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는 핵확산 금지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국가로서 최근 국제적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동결 해제문제를 미·중과 함께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요 국가이기 때문이다.

둘째, 러시아는 한국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기초로 한 3각 경제협력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 3각 경제협력은 남북 양자간 협력보다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다. 그 동안 남북교류협력은 북한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한 정보 부족과 남북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자협력보다는 다자협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러시아와의 3각 협력이 중요한 것이다. 3각 경제협력이 가능한 사업에는 TKR-TSR 연결사업과 극동·시베리아 지역 공동개발, 그리고 북한지역내 산업시설 재건과 남북경협사업의 연계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TKR-TSR 연결사업은 북한의 안정화와 신뢰구축 확대, 통일비용 삭감, 북한의 하부구조 건설과 개혁·개방 구체화,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의 자본 투자 유도, 한국의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서의 발전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극동·시베리아 지역 공동개발사업은 석유, 가스 등 에너

지 개발사업과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사업을 고려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에너지 수입시장의 다원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 산업시설 재건과 남북경협사업의 연계는 경제적 타당성의 바탕위에 노동집약적인 산업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한국은 북·러관계 발전에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양국관계발전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 탈피와 경제위기 극복을 통한 체제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는 곧 한반도의 안정화에 직결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편향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우선 북·러관계 발전에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는 경협사업과 사회·문화·재러시아 동포(고려인)문제 등 3자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북·러 군사협력은 제한적이지만 한반도 안보환경에 민감한 문제이므로 긴밀한 한·러 군사교류와 협력을 통해 항상 확인해야 할 것이다.